

# 고령사회의 삶과 일

The Life & Work  
in the Aged Society



---

## 권두언

시대정신을 담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하여 / 김미곤

---

## 이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소고 / 서정희  
고용복지와 교육복지가 연계 융합된 노인일자리사업 / 이준우

---

## 고령사회와 노인일자리 동향

사회참여로서의 노인 평생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김영석  
지역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사업의 연계 방안 / 김현미  
시대적 변화와 다양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방향 / 강시내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향 / 조준행

---

# 목차

## 권두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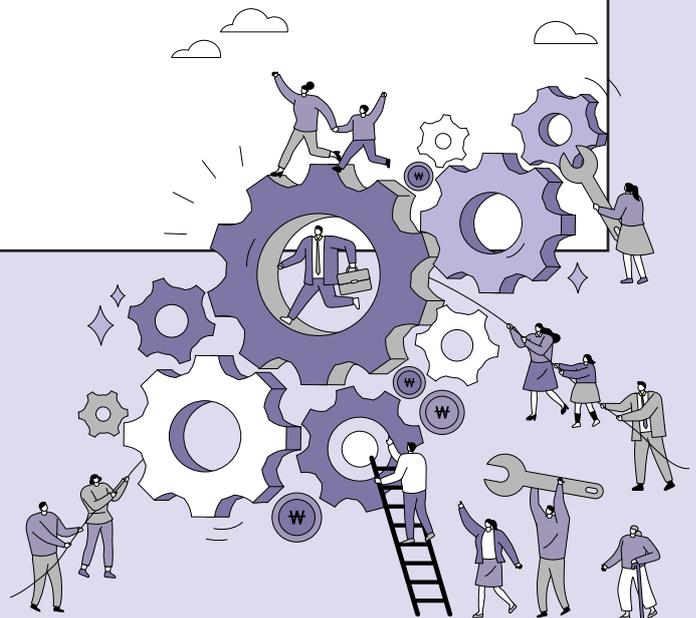
- 1 시대정신을 담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하여 / 김미곤

## 이슈

-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소고 / 서정희  
7 고용복지와 교육복지가 연계 융합된 노인일자리사업 / 이준우

## 고령사회와 노인일자리 동향

- 11 사회참여로서의 노인 평생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김영석  
14 지역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사업의 연계 방안 / 김현미  
16 시대적 변화와 다양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방향 / 강시내  
21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향 / 조준행





## 시대정신을 담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하여

2021년을 한 달 남겨둔 지금, 코로나19로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 펜데믹은 우리 사회가 그 간 간과해 왔던 환경문제, 돌봄,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New Normal)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봉쇄되고 단절된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통해 우리는 연대와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인간다운 삶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금 던져봅니다. 특정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공유되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시대정신(Zeitgeist)이라 부릅니다. 시대정신은 ‘현 시대의 사람들이 지닌’ 그리고 ‘현 시대에 요구되는’ 보편적인 자세나 태도를 말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 속에서,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대상을 투영한 대표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2000년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의 4고(빈곤, 질병, 고독, 무위)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200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미성숙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속에 심화되는 노인복지 문제의 빈틈을 채워주는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수는 2004년 2.5만개에서 올해 80만개에 이르기까지 약 32배 가량 양적인 성장을 해왔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소득 보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노년기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 우울감 해소, 사회 지지망 형성, 의료비 절감 등 다차원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노인인구가 40%에 근접하여 세계 최고령 국가에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고령화사회(노인인구가 전체의 7% 이상)를 맞이했던 프랑스(1864년), 이탈리아(1927년), 독일(1932년), 미국(1942년), 일본(1970년)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뒤늦게 2020년 고령화사회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의 선진 사례를 지켜봐 왔던 국가에서, 전 세계가 모두 주목하는 초고령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초고령사회라는 예견된 미래 속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대정신을 담아 사회의 물음에 답을 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일차적으로 정책 대상들의 삶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시대정신을 담은 정책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지구적 시각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조명하고, 노인 한 분 한 분의 삶을 마주하여 정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노인일자리와 유기적 관계에 있는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며, 그와 동시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노인의 행복한 삶 하나하나를 위한 고민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고령사회의 삶과 일> 5호는 ‘초고령사회 노인일자리 비전’이라는 기획주제로 다양한 학계·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현 시점의 시대정신에 비추어 노인일자리사업을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고령사회의 삶과 일>은 노인일자리사업 및 고령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담론을 다루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김미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소고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현장의 목소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분들을 만났다. 각자의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실무 책임자로, 전담인력으로 일하고 계신 14명을 네 차례에 걸쳐서 만났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이 사업의 현황을 듣고 싶었다.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는 현황, 문제점, 대안들에서 내가 찾아내지 못한 목소리를 들었으면 해서였다.

너무도 많은 목소리들이 들렸다. 이 지면을 통해 다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정책의 대상과 정책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노인 계층의 분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제외하고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하위 70% 노인)이거나 참여자 대기인원이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법적 빈곤층이 아니면서,

상류층도 아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 대상의 범주화는 몇 가지 문제와 연결된다. 무엇보다 정책 대상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소득보장에서 노인 계층을 분화시킨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그리고 기초 연금 대상자가 아닌 노인으로 분화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노인 계층에서 가장 극빈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된다. 그 이유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2021년 현재 한국에서 자산 조사가 적용되는 제도는 무려 86개 제도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박탈은 빈곤층에게 있어서는 공포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박탈이 예상되는 급여 정책에서 수급자를 포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보장이 가장 절실한 극빈층 노인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폐지 좁는 노인은 주로 근로능력이 잔존하는 극빈층 노인이 상당하다(소준철, 2020). 가장 힘들고 시간 대비 소득 효과가 가장 낮은 일자리에 극빈층 노인이 종사하고, 상대적으로 덜 힘들고 시간 대비 소득이 높은 일자리에 극빈층이 아니면서 상류층도 아닌 노인이 배치되고, 상류층 노인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활동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 현행 적용대상 규정 상 참여자 포화 상태. 소득기준 완화 필요(수도권)

실제 참여자의 대부분은 참여 가능 대상 중에서도 소득 분위가 낮은 노인층이 주를 이룬다. 현재의 사업량을 더 확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참여자 발굴의 어려움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들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사업량을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실무책임자들은 활동능력이 낮은 사람들도 선발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한다.

“지금은 이게 기초연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참여자 구하기가 힘들어요. …… 기초연금으로 딱 묶어놓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을 다 뽑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연구참여자 8)

게다가 도입된 후 60년 만에 폐지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2021년 10월 폐지)은 공적 사회보장 시스템에서의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오히려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 수용 가능 이상 수준으로 선발

2004년 사업 시작 이후 노인일자리 사업은 예산과 참여 인원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2004년 3천 5백여 명이었던 실적은 2020년 시점에 약 22배가 늘어난 76만 9천 6백여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선 기관들에서는 기관들의 수용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 수요처 발굴 포화

사업량을 가파르게 확장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참여 노인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이 사업이 현금급여가 아니라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 노인들이 일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및 활동할 수요처를 발굴하고 늘려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4년 30만 개, 2016년 40만 개, 2018년 50만 개, 2019년 60만 개 목표량을 넘긴 일자리 수는 그만큼의 수요처 발굴을 의미하고,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 제공할만한 일자리를 발굴해내야 한다는 사업 수행기관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급격한 수요처 발굴은 사실상 포화상태를 넘어선 듯 보인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하실 곳이 없어요. 사실 공익형도 그렇고 수요처가 다 포화돼 있어서 거리로, 공원으로, 놀이터로 나가서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집중되고, 특히 시내 쪽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읍면동이라든지 시외 지역으로 마을 가꾸기라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대부분 어르신들은 시내 지역에 많이 계시고 시외 지역은 또 건강상 나이가 많으시고, 마을마다 다 조금씩 계시니까 가실 곳이 없어요. 특히 할만한 수요처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요처 개발하는데 수행기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2)

### 민간 영역의 노인 자원봉사 활동 사라짐

노인일자리사업의 급증은 민간 영역의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거의 흡수한 것처럼 보인다. 지역 사회에서 자발성에 기초한 많은 자원봉사 활동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활동으로 대체되었다는 우려도 있다. 물론 이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민간의 자원봉사란 지역간 격차를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활동을 공공이 맡게 되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자원봉사의 지역 간 격차를 상쇄시키는 효과도 낳았다.

“사실 노인 일자리 이렇게 강화되면서 사회활동만,

그러니까 자원봉사형 일자리가 사실 다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르신들 인식 자체가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근로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어르신이 이거 사회참여하는 거다, 가서 자원봉사하는데 9,000원씩 받는 거야, 27,000원씩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다 강화됐어요. 옛날에는 복지관에 있을 때 그냥 자원봉사로 하던 걸 이제는 돈을 받고 자원봉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다 변명이 됐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4)

### 노인일자리사업의 끊임없는 영역 확장

노인일자리 사업의 급증은 민간 자원봉사 활동만 흡수한 것이 아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 소득보장의 확대의 필요성이라는 일의 시급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기관의 사업 수행량 할당이 중요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사업의 내용별 공익성과 사회적 의미를 구체화해서 지침을 내리지 못했다.

수행기관들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에 유의미한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일차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해갔지만, 지속적인 사업량 증가는 시장에서의 일자리로도 확대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공원, 주차장, 어린이집, 관공서 등의 청소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공공영역에서의 수요처 발굴이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했다. 그 결과 일부 수행기관들은 민간 영역에서의 원룸, 영화관 청소 등의 수요처를 발굴하기도 한다.

특히 그 방식은 파견사업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법적으로 파견 근로와 용역 근로는 비정규 법안에 의해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급격한 확대는 일선기관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점검하고 검증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새로운 모색을 향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멀티플레이어라고 불린다(김기태 외, 2021). 소득보장, 고용보장,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다기능을 하나의 정책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멀티플레이어로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현장은 폭발 직전처럼 느껴진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노인 계층은 한국 사회에서 경제발전이라는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포괄 등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안착하지 못했다. 현재의 노인들이 경제활동인구이던 시점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매우 소수에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으로 포괄하지 못했고, 이는 현 세대 노인들의 심각한 빈곤 문제로 이어졌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정책이 다시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댓가로서 주어진다. 일차적인 소득보장을 국가가 제도를 완비하지 못해서 제도적으로 포괄하지 못했다면, 소득보장은 일의 댓가로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진정으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참여한다는 보람과 네트워크의 유지, 이러한 활동들이 낳는 삶의 만족과 행복, 건강증진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

바야흐로 변화가 요청되는 시대다.

### | 참고문헌 |

- 보건복지부(2021a).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소준철 (2020). 『가난의 문법』. 파주: 푸른숲.
- 김기태·정은화·류진아·이소정·박경하·염태산·김보미 (2021).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 분석.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복지와 교육복지가 연계 융합된 노인일자리사업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리나라 속담에 “저 먹을 건 타고난다.”는 말이 있다. 그건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한 집에 자식 복만 많을 때, 태어난 이상 굶어 죽는 일이야 있겠냐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을 때 흔히 쓰던 말이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노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속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더욱이 어떻게든 일하며 살려고 애쓰는 노인들을 봐도 그렇다. 사실상 노년의 노후생활비가 충분치 않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일하는 모습은 거의 일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옛날 속담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저 먹을 건 타고 난다.”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는 먹을 게 저절로 생긴다는 소리가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자립할 수 있는 능력 하나씩은 타고난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누구에게나 잘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태어났고 그걸 잘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는 삶의 희열을 느낄 수가 있다. 우리 노인들에게 이런 자존감을 갖게 해야 할 책임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있다고 본다.

## 고용복지와 교육복지를 연계 융합한 노인일자리사업

무엇보다도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부족한 소득을 보조함과 동시에 적절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동적 노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인복지는 보호적이며 시혜적인 측면이 강했다. 돌보고 지원하는 복지였다. 기존의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고용복지(workfare)로 전환되어야 하며, 동시에 고용복지는 교육복지(education-fare)와 연계하여 더 견고하게 융합할 필요가 있다. 고용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이다. 시혜적 복지와 달리 고용복지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득을 획득하게 한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과거 해왔던 직종이 아닌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는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 없이는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교육을 통해 노인의 일자리 분야를 확대하고 동시에 그 확대된 분야에 뛰어 들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보다 양질의, 보다 생산적인 노인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복지다.

## 사회적 학습망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만약 교육과 훈련을 통한 노인 개개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소홀히 한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시혜적

복지 의존도를 크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노인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우선, 노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학습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학습망(social learning net)'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을 구축해야 한다. 이 '사회적 학습망'으로서의 역할에 기반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하되 지자체·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기업 등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교육복지가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훈련과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 개인의 능력과 학습욕구, 노동시장의 수용 등을 감안한 맞춤형 학습과 직업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60대', '남성', '고학력'노인 등 대상범위를 넓혀 보다 창의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이들 노인들의 경제적 욕구 수준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이를 수행해내는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들

반갑고도 희망적인 일은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비롯하여 노인의 고용복지와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대한노인회 등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사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기관들의 노인일자리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조건들이 있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초기에는 인력지원이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노인들이 만들어내는 생산품들과 업무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판매하는 마케팅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을 충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잡 코치(Job Coach)'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노인

개인별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복지서비스 지원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셋째, 안정적인 작업물량을 확보하는 일과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업체와의 연계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진 중견 사업장 등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학습-고용-복지' 연계 융합 모형에서 나타나는 '평생 교육 훈련 체계'

이상과 같은 여건들이 조성되면 그 다음으로는 노인들이 지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자리 분야의 개발과 그와 관련된 직업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직업교육과 훈련은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에 크게 유용할 것이다. 가령 핀란드는 1998년부터 노인들의 경험이야말로 가장 귀한 국가적 자산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고용센터에서 노인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감면해줘 1998년에 36%였던 만 55세부터 64세까지의 취업률을 58%로 끌어올렸고, 2020년 현재까지 50% 후반 대를 계속 유지해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만 65세 이후에도 본인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용보장을 해나가게끔 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이며 시혜적인 노인복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처를 '고용복지와 교육복지를 연계 융합한 노인복지 실천'을 통해 실현해나가고 있음을 말한다. 바로 여기에서 핀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 덴마크, 스웨덴 등과 같은 북유럽식 '학습-고용-복지' 연계 융합 모형에서 나타나는 '평생 교육훈련 체계'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들 북유럽 국가에서는 평생 재교육과 유기적인 재취업 등을 가능케 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과 효과적인 운영을 노인 사회정책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정부와 사회가 평생 지원하는 각종 재교육, 취업알선 프로그램이 노인복지 실천의 핵심 영역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과 내용의 핵심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고용복지와 교육복지가 연계 융합된 노인일자리사업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즉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민간 분야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 지속되게끔 하는 데에 모아져야 한다. 물론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시장 정책이 50대 퇴직자의 재취업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고, 노인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 팽배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민간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목표한 대로 그 성과를 내는 것은 녹록치 않은 작업이다.

현재 민간 일자리 유형에서 창업형은 초기 시장형 사업단 모델에서 벗어나 고령자친화기업과 같은 기업형 모델이 창안되었고, 취업형 역시 인력파견형보다 발전한 기업연계형, 시니어인턴십 사업이 시작되었다.

민간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행기관이나 기업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가동되고 있다.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장기 취업유지금, 위탁운영비, 채용성공보수, 기업설립 지원 등 기업의 고용비용을 경감하거나 장기고용을 유인하는 지원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 성과는 아직까진 미미하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획득한 소득도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민간 분야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다가도 자꾸만 공공형 일자리로 회귀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럼에도 근로 의욕이 매우 높고, 생계비 마련 욕구가 큰 우리나라 노인 집단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근로 역량을 가진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업이 된다. 이제 이 부분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다. 이런 맥락에서 가깝고도 먼 일본의 성공적인 사례는 큰 울림이 있다. 60세 이상 노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노인 고용 기업 가토제작소"의 착한 노동 프로젝트다. 가토 게이지가 쓰고 이수경이 번역한 책 <60세 이상만 고용합니다.>(북카라반 출판사, 2014년 발행)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제시한 '학습-고용-복지' 연계 융합 모형에 기초한 노인일자리사업의 모범이라고 판단된다.

자동차와 항공기 등에 쓰이는 금속 부품 등을 생산하는 가토제작소는 1988년에 60세 이상 노인 직원을 고용하였다. 2001년 4월에는 노인 15명을 고용한 이후 현역 직원들도 60세가 넘어도 자신이 원하면 재취업을 하게끔 하면서 2013년에는 전체 직원 100여 명 중에서 60세 이상은 절반이 넘고 최고령자는 80세가 넘는다. 주요 공정은 현역 직원이, 단순 지원 업무는 노인 직원이 맡는 '능력별 업무 분장'을 통해 1년 365일 연중무휴 공장을 운영한다. 다시 말해 주말과 공휴일에는 노인 직원이 전담으로 일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토제작소에는 ‘대장장이 학교’가 있다. 그 분야의 숙련공이 직접 만든 교과서를 준비해서 강의와 실기를 지도하는 배움의 장이다. 후배들에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회사 매출에 기여한다. 회사 매출액은 2001년 이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 지자체 및 기업과의 연계 협력 노인일자리사업 모형 개발

이러한 가토제작소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지자체-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연계 융합 모형을 개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노인을 고용하면 지자체가 시니어클럽과 같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이 회사에서 노인이 잘 적응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직능훈련과 지도(또는 잡코칭) 및 상담 등을 회사와 협력하되 이를 대행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 제시한 가토제작소가 하는 일을 지자체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그리고 기업이 ‘삼위일체’적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재구성된 융합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당연히 실제 작업의 현장은 기업이 되겠고, 노인 일자리가 현실화 되게끔 직접적인 활동의 상당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이 맡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 모든 일을 재정적이며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지자체가 된다.

이제 공공형 일자리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고 봐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으로 전환된 현실을 벌써 강하게 체감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 분야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확장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일자리의 지속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근로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형 일자리보다 근로시간, 급여수준, 근속기간 등 일자리 조건이 개선된 다양한 취업형, 창업형 일자리 모델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동시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원 개발이 병행해야 한다. 즉 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세밀한 직무지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경쟁역량 강화, 담당 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존 노인일자리사업의 패러다임과 조직 및 형태 등 모든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재구조화해서 혁신적인 융합 모델을 개발해야 하겠다는 각오로 신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이 감당해야 할 선택적인 활동이 아니라 필수적인 숙명이자 사명이다.

#### | 참고문헌 |

- 가토 게이지 저, 이수경 역 (2014). 60세 이상만 고용합니다. 북카라반.
- 이준우 외 (2021). 시니어클럽의 혁신적 발전을 향한 인적 자원 개발 및 경영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시니어클럽협회.

# 사회참여로서의 노인 평생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김영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장수를 축복으로 여기는 시대는 끝났다. 과거에는 지혜와 연륜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노년이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고난의 시기로 여겨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네 가지 어려움으로 가난(경제고), 신체적·정신적 질병(질병고), 심리적 외로움(고독고), 할 일 없음의 고통(무위고)이 존재한다(한정란, 2015).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국가를 초월한 현상이지만, 한국의 노인들의 현실은 더욱 녹록치 않다.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20년 인구 10만 명 당 25.7명(하루 평균 36.1명)으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았다(연합뉴스, 2021.09.28).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1 자살

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률이 60대 이하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30명대이지만, 70대는 46.2명, 80대 이상에서는 67.4명으로 크게 늘어난다(매일경제, 2021년 8월 16일). 높은 자살률로 대표되는 노후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평생교육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현상 특성

한국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낮고 일부 영역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202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성인(25-79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0.0%인 반면, 65-79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9.5%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65-79세의 평생교육참여 영역을 보면 스포츠강좌(30.4%), 음악강좌(21.5%), 직업능력향상교육과정(17.7%)에 편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영역(건강 및 의료강좌: 5.6%, 미술강좌: 5.6%, 외국어강좌: 1.4%)에 대한 참여율은 저조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0 노인실태조사」(이윤경 외, 2020)에서도 구체적 수치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향이 발견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평생교육참여율은



11.9%밖에 지나지 않으며, 건강관리/운동(44.3%), 문화예술(28.2%), 정보화(11.4%) 영역의 참여에 집중된 특성이 발견된다. 미래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전반적 참여율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평생교육의 주요 영역으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이 제시되어 있다. 위 여섯 가지 영역 중 노인의 사회참여와 관련이 깊은 직업능력 향상교육 및 시민참여교육과 관련한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직업능력 향상교육 현황 및 문제점

노인 대상 직업능력 향상교육은 노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매우 중요하다. 2017년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전체국민의 중위소득 50% 이하)은 43.4%로, 이 수치는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통계청, 2020). 노인이 처한 빈곤의 원인 중 하나는 이른 퇴직이다. 통계청(2019)의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부가조사」에 따르면 취업 경험이 있는 55-64세(약 770만 명)가 가장 오래 유지했던 직업을 그만둔 나이는 2019년에 평균 49.4세(남성: 51.4세, 여성: 47.6세)였다. 약 50세를 전후하여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경험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일할 기회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새로운 직업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중장년 및 노인 대상 다양한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60플러스 교육센터」이다. 이 이외에도 서울시의 「서울시50+재단」,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다양한 민간 시설 등에서 예비 노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취업 및 전직을 위한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노인 대상 다양한 직업능력향상교육이 추진되고 있지만, 직업능력 향상교육이 반드시 노인의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 직업능력 향상교육과 함께 노인의 취업을 돕는 직업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노인의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노인의 근무능력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시민참여교육 현황 및 문제점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6대 영역 중 하나인 시민참여교육은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의미한다(희망제작소, 2014.01.15.). 특히 최근 들어 학교에서 학령기 학생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및 각종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시민참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UN은 1991년 UN총회에서 전 세계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으로 자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을 채택하였다. 이 중 참여는 노인이 자신들의 삶(복지)에 영향을 주는 정책 형성 및 이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Doron & Mewhinney, 2007)을 의미하며 이는 시민참여교육과 깊은 관계가 있다.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민주시민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신미식, 2019). 노인대상 시민참여교육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학습하는 인권교육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들이 매년 4시간(사이버교육 6시간)을 수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노인들이 수강할 수 있는 노인인권교육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인권교육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의 주체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교육방법(발표법, 토론법, 실습 등)을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 앞으로 노인들이 수강할 수 있는 노인인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학계와 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 마무리하며

노인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무조건적 부양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노인들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가 중요하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노인의 직업능력 향상교육과 시민참여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실현과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격려하는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 참고문헌 |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 매일경제(2021.08.16). "남성노인 자살률 여성 3.2배...70대 男 10만명당 75명"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92111/> (2021년 10월 29일 접속)
- 신미식(2019). 한국 노인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필요성과 과제. 노년교육연구, 5(2), 83-104.
- 연합뉴스(2021.09.28). "한국 자살률 OECD 1위...20대 여성·10대 남성 크게 늘어"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8073600002> (2021년 10월 29일 접속)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외(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19).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 통계청(2020). 2020 고령자 통계.
- 희망제작소(2014.01.15.) "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https://www.makehope.org/category/activity/new-activity/hopeinst-newsletter/> (2021년 10월 29일 접속)
- Doron, I., & Mewhinney, K. (Eds.) (2007). The rights of older persons. Jerusalem, Israel: JDC-ESHEL.

# 지역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사업의 연계방안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코로나-19와 노인돌봄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노인복지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어르신과의 직접 만남이 어려워졌고, 함께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줄어들었다. 백신접종이 진행되며 위드코로나 단계를 맞이하였지만 노인 돌봄의 현장에서는 건강상 취약한 상태에 놓인 어르신이 많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행인력과 어르신 모두 한 번 더 방역수칙을 지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구 구조상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은 매년 과제로 주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추가확산 방지와 노인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노력이 함께 필요한 지금, 어느 때보다도 무게감을 느끼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시작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시작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 이전까지 제공되어온 분절적이고 유사한 성격의 6개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장기요양 이전 단계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작되었다. 만 2년째를 맞는 2021년 현재, 약 40여만 명의 취약계층 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은 개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및 지원 등 필요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신체적인 기능제한 정도가 높은 이용자를 중점돌봄군으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은둔·우울의 정서적 고위험군 노인을 대상으로 특화서비스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노인의 신체·정서·생활상 어려움과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노인맞춤돌봄 현장에서의 든든한 동력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전달체계의 개선 및 보완의 과제가 남아 있다. 2년 가까운 짧은 기간 안에 정착되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각 지자체, 광역지원기관, 수행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수행인력의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현재 전국의 645개 기관에서 3만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취약노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지원사의 90%가 여성인력으로 재가방문 시 여러 가지 안전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사 휴가 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에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일자리사업과의 협력일 것이다. 현재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파견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19개 기관에서 2,388명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생활지원사들이 대상자 방문 시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안전지원, 생활교육, 집단 프로그램 지원, 가사 및 이동 지원, 지역자원연계 지원 등을 주요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동년배 취약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년기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는 이들은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협력자가 되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사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통합돌봄 구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늘어나는 돌봄 수요 속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사회를 구축해 가는데 함께 힘을 더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사업의 연계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가 지향하는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차점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의 3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노인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같은 지역사회의 일원 이므로 이웃이자 친구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지역사회 구성원 간 관계형성으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조성되므로 날로 약화되는 지역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둘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은 해당 지역에 오랜기간 거주하여 지역사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거주지의 상황에 정통한 노인이 보조 인력으로 참여하면, 1차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생활지원사와 더불어 또 하나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취약계층 돌봄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보탬이 된다.

셋째, 지역사회 노인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참여하게 되면 지속적인 지역사회 내 돌봄인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미국의 SCSEP와 같이 훈련과 교육체계를 거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지역사회 돌봄인력으로 활약하는 시스템으로의 확대를 기대한다.

이렇게 두 사업 간의 연계는 각각 지역사회 구성원 간 관계 형성, 추가적인 안전망 제공, 지속적인 돌봄자원의 확보 측면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전달체계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수반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돌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돌봄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확신한다.

# 시대적 변화와 다양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방향



강시내  
김포시니어클럽 과장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이 총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로 통계청은 2017년 고령사회가 된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수업시간에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는 설명을 교수님께 전해 들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불과 4~5년 뒤 맞이할 초고령사회를 논하고 있으니 사회적 대변화와 전환 시기 속에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동안 노인이라는 세대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2008년~2017년 동안 노인집단의 특성변화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멀지 않은 초고령사회에는 노인 가구 유형 중 독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가 보편적인 유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이후 대졸 이상 학력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노인세대의 교육수준은 초고령사회에서 더욱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근로사업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사적이전소득은 감소하였다. 평균 자녀 수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사적이전소득의 감소세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며, 근로사업소득과 연금소득 의존성이 커질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해져, 노년기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한 한편으로는 10여 년 동안 사회참여 경험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참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만족도가 증가하였지만 제공되는 일자리는 여전히 단순노무와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소득보전 활동 및 사회참여를 도와 능동적이고 활기찬 노년기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부양 부담을 절감시키는 목적으로 2004년 정부 주도하에 시작되었으며, 18년이 지난 2021년 현재 80만 명이 넘는 노인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양적으로는 약 32배가 늘어났으며 노인인구의 약 9%가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소득을 보전 받고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양적 성장을 해오는 동안에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성, 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명칭과 유형이 여러 번 바뀌었고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의 양적 확대와 참여기준의 완화, 선발기준 수립, 활동기간의 연장 등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반면, 상명하달식 일자리 배정량 공급과 실적 위주의 양적 평가 기준, 전담종사자의 장기근속 한계 등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일자리 영역에서 내실화를 기하기에는 여전히 아쉬운 환경이다.

게다가 학력, 소득, 근로 능력 등의 측면에서 다양해지고 고도화된 초고령사회의 노인집단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국정과제의 조기달성으로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금,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노인집단의 특성과 사회적 변화 기조를 아울러 반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기를 바라며 수행기관 실무자로서 몇 자 적어본다.

#### 변화하는 노인세대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은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의 맏이인 1955년생이 65세를 넘겨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해로 기록되어 있다. 1,700만 명에 이르는 1, 2차 베이비부머가 단계적으로 20년간 노인 인구로 편입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의 노인세대와 특성이 다르다. 이 세대는 기존 고령자보다 건강하고 노후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왔으며 기존 노인세대와 경험과 자산도 다르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개편체제가 신노년 세대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10년 전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할 때 “베이비부머 세대가 곧 유입 될 것이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신노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노년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등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에 대한 고민과 준비들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초고령사회 노인의 다양성과 사회정책적 대응연구에 따르면 2008~2017년 노인여가시설 이용율은 경로당이 23.9% 포인트, 노인복지관이 8.2% 포인트 각각 감소했으며, 이용희망율도 경로당은 21.1% 포인트, 8.4%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 노인 및 베이비부머

욕구조사(2017)에서도 노인복지관 이용희망 평균 나이가 69세로 나타나 60대 신노년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앞으로 향후 5년간 연간 5% 증가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노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 간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신노년 세대에 환영받는 노인복지서비스가 되려면 사업량을 기준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공익형 위주 일자리의 유형별 재편성과 함께 참여기준을 완화하는 등 노인 전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사업단의 개발 및 사전교육 과정 개설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민간영역의 일자리 개발에서도 수행기관에서 단편적으로 특성화된 사업에 기대하기보다는 취업상담부터 참여희망 분야의 선택과 교육, 참여와 사후관리까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자계속고용제도와 같은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의 주체로서의 지원제도 및 사업이 절실하다. 그 밖에도 지속적인 인식개선을 통해 지역사회나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 수행함으로써 이들이 계속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고령의 노인들이 배제되지 않고 주역세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비대면과 디지털 가속화로 인한 전달체계 전환

2020년은 영구히 기록에 남을만한 해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과 더불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겪었으며 유례없이 일과 생활이 모두 중단되고 정지되는 시간들을 경험했다. 현재 워드코로나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코로나를

경험한 이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비대면과 디지털을 활용한 전달 등 노인일자리사업의 운영 방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에 대면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져있던 활동들을 비대면 영역으로 개발하는 한편, 활동수요처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비상상황 시 전환할 수 있는 대체활동을 계획하므로 일자리 중단을 최소화하여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어르신들의 소득단절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교육 진행에 있어서도 올해 상황을 보면, 방역기준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 면적당 수용인원을 계산하여 최대 1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교육실에서 수차례 반복되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직원 1명이 1일 2시간이면 소요될 업무량이 3일에 걸쳐 5회를 진행함으로써 업무 소요시간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업무소요를 줄이고 전달방식 등의 다양화가 추구하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각종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워크북의 형태로 교육 인정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교육방법을 고안하였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종사자 교육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공통으로 제공되는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온라인으로 참여자들이 교육을 듣고 수행기관에서 완료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sup>1)</sup> 올해 교육부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온라인 수업 형태를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공통기본 교육을 시작으로 점차 전문화된 교육과정들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수행기관에서는 그 밖의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한 영역(실습 등)과 온라인 교육이 불가능한 대상을 위한 집합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운영이 가능해진다면 사업담당자는

참여자의 활동관리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새로운 일자리 개발 등에 더욱 집중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 준비과정이 선행되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먼저 참여소득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참여소득은 1990년대에 영국의 경제학자 앤서니 앳킨슨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교육, 훈련, 돌봄 같은 사회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소득을 지불하자는 것이 주안점이다. 사회적 약자 및 배려자 누구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사회에 기여 할 수 있으며 이는 고립을 극복하고 사회적 참여와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소득은 민간영역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영역의 사회적 기여 형태이며 개인의 참여 동기와 사회적 역할에서 합의될만한 소득을 필요로 한다.

사회기여, 지역공동체 참여의 의의를 갖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대표적인 참여소득 사업이 아닌가 싶다. 다만 현재의 노동에 대한 대가인 활동비 지급에서 좀 더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 일자리 참여(노동)을 준비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된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한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일자리 제공 및 연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직종개발이나 상담 및 훈련의 과정 없이 바로 노인일자리 참여 및 취업 연계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노인의 특성, 그리고 고용능력에 적합한 일자리 연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및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작게는 앞서 이야기했던 참여자들의 비대면 활동을 위한 온라인 및 디지털 활용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 영상통화를 통한 상담, 안내자료

2) 필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일부를 정리한 것임.

전송파일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습득해야 한다. 디지털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교육의 영역으로 요구되는 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생산적 활동, 국가재정 지출의 예방적 차원의 사회참여 활동에서 참여소득 사회서비스로의 기초 변화와도 연관되어 있다. 참여 어르신들의 태도나 활동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세대 갈등이나 정부예산 투입 효과성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품격과 사회적 가치와 미션 등이 사전에 공유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소양을 축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인드를 함양하고 기술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교육시간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의 실현이 일정 부분 가능하나 시장형의 경우에는 인건비로 지급될 수 있는 한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참여자가 생산의 주체로서 근무시간 외 교육기회를 늘려 제공하는 것은 기관의 부담만 가중되어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취업알선형은 더욱 더 어려운 실정이다. 예산 구조상

선 취업 후 예산집행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사전교육을 진행할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취업에 성공하여 출근하는 참여자에게 별도의 시간을 내어 교육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시장형과 취업알선형 사업은 예산설계를 재고하여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이 있기를 요구한다.

넓게는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분야의 개발에서부터 상담과 교육(훈련) 그리고 일자리 및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업을 위한 노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화 되어야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베이비부머의 경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들의 경험과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성공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 구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참여소득 또는 소득보장 차원의 지원이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적합 직종 맞춤형, 능력별 과정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취업을 연계하고 참여자와 사업장의 사후관리를 하는 과정이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된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의 접근성과 효과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60+교육센터가 직접운영 및 위탁운영 형태로 존립한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단절된 형태로 교육이 운영되고 있어 그 기능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실현하는데 교육은 필수적이다. 또한, 시장형과 취업알선형 사업 참여자의 취득한 기술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단계적 교육과정도 필요하다. 일자리 중앙 교육 기관으로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기관의 참여자에 대한 교육 욕구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초고령사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노인일자리 80만개 일자리 확충이라는 양적 성장에 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왔으며 성과를 달성했다. 이제는 노인일자리 내실화를 기해야 할 차례이다. 베이비부머 세대 특성에 맞는 신규 일자리의 개발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서 일자리 참여로의 목표전환이 필요하다. 일률적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참여 노인들의 니즈를 고려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일자리를 내실화하여 진일보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 참고문헌 |

- 박경하(2021). 노인일자리 진단과 개선과제. 참여연대
- 박경하(2020).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방안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0).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
- 전주시 심포지엄(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인일자리 길을 찾다
- 김경래 외(2020). 초고령사회 노인의 다양성과 사회정책적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정숙(2021).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학원
- 신우철(2021). 미래사회 노인일자리, 사회적 가치의 생산으로 대전환해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이상준(2021) 참여소득에 주목한다. 한겨레
- 김포복지재단(2017) 김포시 노인 및 베이비부머 욕구조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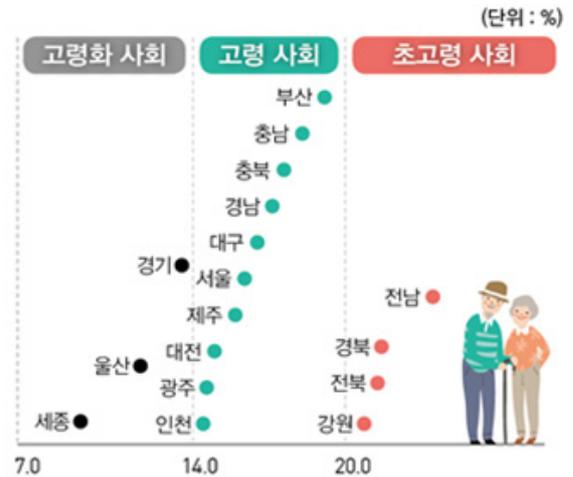
#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방향



**조준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략기획부장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 경북, 전북, 강원은 이미 올해기준 초고령 사회 지역이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과, 이에 따라 생활비 보탬을 위해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증장기 수요 추계'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직접적 수요 집단은 2020년 기준 123.9만 명에서 2035년 158.2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지난 16년간 빠르다는 노인인구 증가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규모 확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향후에도 증가세는 둔화될지언정 상승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이다.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은 국비기준 1조 4천 4백 2십억 원으로 2021년 대비 8.4% 증액편성되었다. 예산증가 사유의 대부분은 목표 사업량 확대(82만명→84.5만명)에 기인한다. 단순 총량 비교의 경우 2.5만명(3%)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림]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2021)

자료: 통계청(2021). 2021 고령자 통계.

사업내용의 유사성 때문에 참여형 자원봉사에 통합된 기존 재능나눔활동 1.5만개가 폐지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량 증가는 4만명(4.9%)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증가된 사업량 4만명의 사업유형별 배분현황을 볼 때 2022년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방향은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로 요약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베이비붐 세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이 1만개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18.2% (5.5만→6.5만)로 단위사업 유형 중 증가폭이 가장

유형	2020년	2021년	2022년	유형
공공형	공익활동 (54.3만)	공익활동 (6만)	공익활동 (60.8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대비 8천명 중</li> <li>• '22년 사업 폐지 - 참여형 자원봉사 사업으로 통합</li> </ul>
	재능나눔 (3만)	재능나눔 (1.5만)	재능나눔 (0만)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3.7만)	사회서비스형 (5.5만)	사회서비스형 (6.5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활용 일자리 발굴 - 공익활동 일자리와 차별화</li> <li>• 전년대비 10천명 중</li> <li>• 지원단가(월 594천원) 전년 동</li> <li>• 기업 사회공헌,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사회 인프라 등과 연계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선도 모델 발굴</li> </ul>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0.5만)	
민간형	시장형사업단 (6만)	시장형사업단 (3.5만)	시장형사업단 (3.8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사업단 질 관리 강화 - 퇴출기준 강화 및 육성지원</li> <li>• 전년대비 3천명 증</li> <li>• 사업량: 취업알선(지자체) 15천명 + 취업알선(민간) 67천명</li> <li>• 지원단가: 취업알선(지자체) 150천원 / 취업알선(민간) 50천원</li> <li>• 전년대비 7천명 증가</li> </ul>
	취업알선 (5만)	취업알선 (7.5만)	취업알선 (8.2만)	
	시니어인턴십 (1.8만)	시니어인턴십 (3.8만)	시니어인턴십 (4.5만)	
	고령자친화기업 (0.2만)	고령자친화기업 (0.2만)	고령자친화기업 (0.2만)	
	74만 명	82만 명	84.5만 명	

크다. 더불어, 2022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전문 직무 개발과 직무기술서 제작 확대를 통해 역량 있는 참여자 선발과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사업유형에 비해 차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0.5만명) 예산 약 79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본 시범사업은 외부 자원 활용<sup>①</sup> 및 전달체계 간소화<sup>②</sup> 등의 노력으로 신노년세대 역량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sup>③</sup> 하는 질 좋은 일자리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① 사회공헌기금 등 외부기금, 수요처 일부 자부담, 공공부문 예산 등  
 ② 수행기관 활용 대신 수요처 또는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직고용  
 ③ 분야예시 : 산업재해 예방, 돌봄 공백 해소, 각종 공공서비스 강화 등

셋째, 전체 노인일자리 중에서 민간형 일자리(시장형 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고령자친화기업) 비중이 확대(18.3%→19.8%, 15만명→16.7만명)되었다. 전체 증가 사업량 4만명 중에서 1.7만명이 민간형 일자리에 배정됨에 따라 42.5%를 차지하며, 이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배정된 37.5%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시장형사업단의 경우 수익성이 있으면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형 재편과 초기투자비 및 성장지원서비스 등 지원 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시니어인턴십과 취업알선형의 경우에도 수행인프라 확대 및 일선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마중물 예산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지속성이 담보되는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비중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공익활동 내실화다. 공익활동 사업은 주로 주된 일자리 경력이 없어 민간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후기 고령층(평균 참여연령 77세) 빈곤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저소득 노인을 우선 선발하는 복지사업 성격의 공익활동 유형도 지속적인 확대(60만→60.8만)가 필요하다. 단, 아이템 측면에서 공익활동 사업 내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고 노인의 경륜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양질의 신규 아이템 개발·보급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의 평균연령 증가 등에 따라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므로 보다 실효성 높은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활동 현장에 배치되는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요원도 확대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다섯째, 노인일자리 수행인프라 확충 노력이다. 최근 10년간 일자리 사업량은 약 3.5배 증가하였으나 수행기관은 1.1배 증가(2011년 1,214개소→2021년 1,288개소)에 불과해 수행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양적 확대의 안정적 달성

및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수행기관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수행기관화 및 노인일자리 수행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신규설립 지원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하나하나씩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년기의 4중고(경제, 건강, 소외, 무위)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노-노케어 등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 세대 간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지금, 2022년이 그 실마리를 푸는 원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 고령사회의 삶과 일

The Life & Work  
in the Aged Society



---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발행인 김미곤

편집인 박경하

편집위원 김가원, 김문정, 배재윤, 천재영, 김예진, 박병현, 윤민석, 신창환, 서정민, 강동훈, 김현숙

감수 강동훈

통권 제5호

발행일 2021년 12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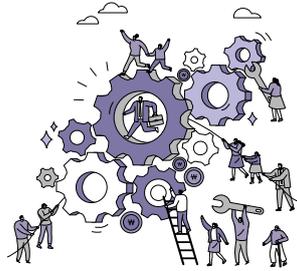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중산동 1701)

전화 031-8035-7500~9

팩스 031-819-0790

홈페이지 [www.kordi.or.kr](http://www.kordi.or.kr)

---



# 고령사회의 삶과 일

The Life & Work  
in the Aged Society